

10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5301.69 (+3.65)		1115.20 (-12.35)
	금리 (국고채 3년)		환율 (원/달러)
	3.224 (-0.043)		1460.95 (+0.65)

정용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트레이더스 만들어”
04



‘1억 성과급’ 산업계, 인재 탈출 막는다

SK하이닉스, 2964% 성과급 연봉 1억 차장, 총급여 2.5억 ‘인력 유출’ 겪은 조선업계 최대 1000% ‘분위기 반전’

성과급 상한 폐지 등 최근 국내 기업들이 경영 성과에 대한 보상에 적극 나서면서 반도체와 조선 등 산업 전반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기업들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례없는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실제 SK하이닉스의 경우 의사보다 급여가 많아져 이공계 인재들의 발걸음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하이닉스는 임직원들에게 ‘초과 이익분배금(PS)’을 지급했다. 지급률은 기본급의 2964%, 연봉의 1.5배다. 차장 3~4년 차가 대략 연봉 1억원(세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총급여가 약 2억5000만



설 앞두고 쌀값 폭등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양곡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등락을 거듭하던 쌀값이 올해 들어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최근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사진은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쌀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원이 되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메모리반도체 판매 호조에 힘입어 43조601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33% 이상 증가한 좋은 성과였다. 성과급은 삼성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 지급률에 따라 연봉의 47%로 책정됐다. 지난

해 직원 1인당 평균 급여가 약 1억 3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 성과급은 6100만원 안팎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이번 성과급을 둘러싸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부별 실적 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성과급 체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DS부문 영업이익은 16조4000억원으로 전사 실적을 견인했지만 DX부문 영업이익은 1조3000억원에 그쳤다. 사업부별 실적이 상이하지만 성과급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 엿보기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4일(화)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지속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불확실성은 경제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0세시대 현실화로 확실한 자산 설계가 절실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와 주식·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강남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를 엿볼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 주 제 :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
-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
- ◆ 일 시 : 3월 24일(화)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40분 ~2시)
-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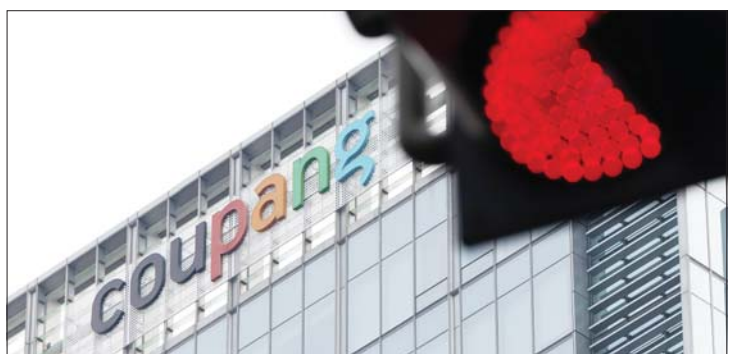
metro®

과기부 “쿠팡 정보 유출규모 3300만건 이상”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내정보 수정·배송지 목록 등 공격자, 비정상적 접근·유출

쿠팡의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개인 이름과 이메일 정보 약 3367만 건, 배송지 관련 정보 약 1억4800만 회가 유출됐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쿠팡 침해사고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나타났으며, 조사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16일 개인정보 유출 의심 이메일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쿠팡은 자체 조사를 거쳐 같은 달 17일 침해사고 발생을 인지했고, 19일 4536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실제



쿠팡 전 직원이 일으킨 침해 사고로 성명, 이메일이 포함된 쿠팡 이용자 정보 3367만3817건이 유출됐다고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했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시스

유출 규모는 3000만 개 이상의 계정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하고, 11월 30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웹과 애플리케이션 접속기록 분석, 공격 범위와 유출 규모 산정, 인증체계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을 실시했다. 공격자가 악용한 이용자 인증 구조와 키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했으며, 공격자 PC 저장장치와 현직 개

발자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병행했다.

조사 결과 공격자는 쿠팡의 ‘내정보 수정’, ‘배송지 목록’, ‘주문 목록’ 페이지 등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해 이용자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주문 정보 등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접속기록 분석을 통해 성명·이메일 정보 약 3367만 건, 배송지 관련 정보가 포함된 페이지 약 1억4800만 회 조회, 주문 목록 페이지 약 10만 회 조회 사실이 확인됐다.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

원회가 별도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고 원인 분석 결과, 공격자는 재직 당시 담당했던 이용자 인증 시스템의 서명키를 탈취해 정상 로그인 절차 없이 인증을 통과할 수 있는 ‘전자 출입증’을 위·변조했다. 인증 서버는 해당 출입증의 정상 발급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갖추지 못했고, 키 관리 체계 역시 퇴사자 접근 통제와 이력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격자는 이를 활용해 자동화된 웹 크롤링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정보를 수집했다.

조사단은 쿠팡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에서도 문제점을 확인했다. 비정상 접속 행위에 대한 탐지와 차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접속기록 저장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 규모 산정과 이용자 식별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또한 서명키를 개발자 PC에 저장하는 등 내부 규정 미준수 사례도 확인됐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5월9일 종료

구윤철 부총리·재경장관 4~6개월 안에 잔금 치뤄야 세입자 살고있어 팔지 못하면 최장 2년 ‘실거주의무’ 유예



지거래허가구역 외 지역은 최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재확인하고 임대기간을 고려해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한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 9일에 종료되며, 세입자가 있어 부득이하게 주택을 팔지 못하는 경우엔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줄기로 했다. <관련기사 2면>

구 부총리의 보고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반드시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월9일 이후에도 최대 4개월 안에 잔금이나 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고 토

구 부총리는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이 집을 (다주택자가) 몇 채 들고 있는데, 다 전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 당장 팔지 못해서 어떡하냐는 것”이라며 “이런 국민들의 애로와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기간이 끝나면 (집 주인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하는 식으로 해서 국민들 걱정을 덜어드릴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세입자가 임대기간을 무한정 늘려서 계약하면 어떡하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첫번째 임대계약에서 남은 기간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임대계약을 5년 하면 어떡할 것인가. 한도를 정해야 하지 않냐”라고 하자 구 부총리는 “2년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메트로 한줄뉴스



- ▲이 대통령 “현재 입법 속도로 국제사회 변화 대처 어려워…여야 떠나 국익 우선 정치 부탁” /사진 뉴시스
- ▲韓 국가청렴도 182개국 중 31위…계엄 등으로 점수·순위 모두 하락

- ▲강선우, 與의원들에 친전 “1억, 제 정치 생명 걸 가치 없다…숨지 않을 것”
- ▲與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불법행위 직접 조사, 대출정보 등 요구 가능”

- ▲국힘 서울시당, 정원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 ▲구윤철 “양도세 중과, 세입자 있을 경우 실거주 2년 유예”